



강 영 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 우리나라 건강 불평등 연구와 정책의 과제

건강 불평등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주류 의학 및 보건학 영역에서 발언권을 획득하였다는 징후를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학 및 예방의학 분야 국제 및 국내 저널에 게재되는 건강 불평등 논문 수의 증가는 이런 징후의 바로미터이다(Khang & Lee, 2012)<sup>1)</sup>. 특히 건강 불평등 전문 연구자들 이외에도 인접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건강 불평등을 주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국민 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 간 건강 불평등이 정부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대한의사협회지에서 건강 불평등을 특집으로 다루는 일도 더 이상 신기한 일이 아니게 되었다(정최경희와 김유미, 2013)<sup>2)</sup>. 10년 전에는 생각하기 어려웠지만, 이제 연구 분야에서 건강 불평

등의 주류화(mainstreaming)는 현실적 목표가 되었다.

정부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건강 형평성 제고가 총괄목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건강 불평등 연구와 정책의 양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이 총괄목표를 상징적, 수사적 의미만으로 그 파급력을 제한할 수는 없다. 건강 형평성 제고라는 총괄목표가 다양한 연구자들과 보건정책 담당자들을 자극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몇몇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건강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한 새로운 형태의 지역보건 사업과 정책이 시도되고 있는 점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앞에 놓인 건강 불평등 연구와 정책

1) Khang YH, Lee SI(2012). Health Inequalities Policy in Korea: Current Status and Future Challenges. J Korean Med Sci 2012, 27(Suppl), pp.S33~S40.

2) 정최경희, 김유미(2013). 건강 수준에서의 불평등: 우리나라의 현황, 대한의사협회지, 56(3), pp.167~174.

에서의 과제는 매우 무겁다. 건강 불평등 연구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였지만, 건강 불평등이 짓누르는 현실에서의 고통의 크기는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 불평등을 정책 의제화하고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구성하는 데에 유효한 연구 결과가 생산될 필요가 있다. 건강 불평등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건강 형평성 정책의 역할도 고민할 시점이다. 건강 불평등 분야의 연구와 정책이 상호 작용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식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에 도달하였다.

여러 가지 연구가 모색되어야 한다. 건강 불평등 측정과 모니터링 연구를 좀 더 강화하여야 한다. 건강 불평등의 시계열 변화, 국가 간 비교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다문화 가족, 주거 빈곤 인구집단(홈리스, 쪽방 거주자 등),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서의 건강 문제를 밝히는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 건강 불평등 문제에 대한 생애적 접근법과 다수준 접근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건강 불평등 기전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각종 매개요인에서의 불평등 완화 정책이 건강 결과에서의 불평등 크기에 어떠한 영향을 줄는지에 대한 연구(시뮬레이션 연구 등)가 조속히 시도될 필요가 있다.

건강 불평등 연구를 가능하게 할 자료원 생성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기존 지역사회 조사나 새롭게 구축되는 코호트/패널 조사에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치 지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생애에 걸친 사회경제적 요인의 폭로를 반영하는 문항들이 각종 건강 설문내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시군구와 읍면동, 학교와 지역사회 수준의 폭로 요인 자료가 건강 조사 자료와 연계될 경우, 다수준 분석은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다. 또한 영국의 화이트홀 코호트 연구와 같이 건강 불평등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둔 별도의 코호트 연구도 기획될 수 있을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 차원에서 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건강 불평등 해소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다. 한편 건강 형평성에 기반한 정책을 시험하고 도입하고 안정화하기에는 열려 있는 시간의 창(time window)이 일반적으로 넓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기에 좁은 창문을 통하여 지역사회 주민, 시민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과학적 근거로 뒷받침되는 건강 형평성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것은 건강 형평성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에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건강 불평등에 대한 특집이 언론, 저널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기획되어 왔다. 보건복지포럼의 이번 기획도 건강 불평등 문제의 의제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은 기회를 통하여 건강 형평성 연구와 정책의 발전을 위한 과제에 대하여 보다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보  
건  
복  
지